

환경문제와 국제무역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지원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던 지난해 12월 8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제3차 총회에 참석한 엘 고어 미국 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이 포함된 선발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어 부통령의 이같은 강력한 입장표명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에 파고드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들의 발목을 붙잡아 미국 경제발전과 무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비록 교토총회에서 고어 부통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있는 한국측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또 올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측이 또 다시 이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래저래 어려운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번 교토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일국의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해도 그같은 상황이 침착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체감했다.

현재 1백 80여개 국제협약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해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개의 환경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CITES 협약 가입으로 생약을 원료로 약품을 만들어 오던 국내

제약회사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오존층파괴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냉장고나 자동차의 냉매제인 CFCs의 사용을 점차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이들 국제협약을 통해 환경보호명분을 내세우며 여러가지로 우리를 죄어오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아예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내의 산업이익을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 기준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면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유럽연합은 승용차 배출가스기준을 설정, 기준이 미달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은 포장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캔용료용기에 대해 사용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환경분야에서 기술을 확보한 선진국들이 환경을 내세워 개도국들이 자국시장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거나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국제환경협약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무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발전이 시급한 개도국 등은 무역측면 보다는 기술, 재정지원과 같은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내에서도 논란이 돼 온 그린라운드가 21세기 초에는 무역과 관련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린라운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91년 10월 미 상원무역소

위원회 막스 보커스위원장이 워싱턴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였다. 그는 연설을 통해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환경 기준 준수 비용이 감안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 이른바 그린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을 많이 들여가며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진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간에는 관세부과나 수입규제를 통해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하고 이렇게 돼야 세계 각국이 한층 더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유해폐기물 교역을 방지하기 위한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산발적으로 진행해 오던 국제환경협약에 만족하지 못한 환경보호론자들의 즉각적인 지지를 받았고 아울러 선진국 대기업들이 이에 적극 가세했다.

지난 91년 부터 무역과 환경에 대해 주요 이슈를 연구해 온 OECD내 무역환경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10가지 의제를 놓고 올해부터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역과 환경을 둘러싼 각국의 다자간 협상은 늦어도 내년 부터는 벌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계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그린라운드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국간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환경분쟁을 일으킬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환경관리체계와 능력, 서비스, 활동성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환경경영국제규격제도(ISO14000시리즈)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ISO14000시리즈가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으나 사실상 무역제재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들은 현재 제재조치가 따로 없는 국제협약 등에 앞으로는 무역제재조치와 환경관세부와 등 각종 제재 조치를 포함시키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IMF사태로 수출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화석연료 사용시 다량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이미 오래전 부터 예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앞으로 화석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수력과 태양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LNG와 같은 청정에너지로 에너지 공급구조를 바꿔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무역전쟁에서 환경이 21세기의 핫이슈로 등장될 것이 예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는 무방비상태에 있다. 정부는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무부 등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를 구성, 산업, 환경, 국제협상 등 3개 분야에 44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지난 94년 1월초 그린라운드가 핫이슈로 떠오르자 당시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그린라운드 대책반을 서둘러 구성했으나 이후 다시 이 문제가 잠잠해지자 지구환

경관계장관대책회의는 물론 대책반까지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다.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협약 준비과정에서도 정부는 한동안 관련 부처를 에너지 담당부처인 통상산업부로 해 오다 막상 교토총회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환경장관을 참석시키자 뒤늦게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환경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기업들도 현재까지는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정부 규제 회피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나마 총설비 투자중에서 환경설비투자비는 1~2% 정도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들의 5~1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이제는 환경문제가 거추장스럽다는 종전의 낡은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선진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환경=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될 때가 됐다.

아직도 일부 경제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강화된 환경기준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로 산업이 이동한다는 '공해천국이론'을 믿고 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견해가 미시경제(특히 개별기업)수준에서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해저감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거시경제(기업군, 국가)수준에서는 공해집약적인 사업이 이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

업구조조정과 타국과의 경쟁, 시장확보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척도가 국민총생산이 아닌 '녹색GNP'(환경부문에 대한 투자와 환경여건을 고려한 GNP)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들이며 이미 몇몇 선진국들이 이를 실제 수치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즉 향후 실질적인 국가선진화나 원활한 무역체제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문제, 부패방지, 환경제도가 3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IMF체제아래 새로운 노사협약을 맺게 된 것도 이같은 흐름의 일환이며 부패방지와 환경문제도 앞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에 밀려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가 사회적 환경관리체계 수립,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환경협력체계 구축, 공공환경설비에 대한 남비(지역이기주의)현상 방지책 마련, 새 환경시대에 대비한 산업체의 환경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

(자료제공 : 연합통신)